

지역맞춤형 일자리 공급방안

일자리 중요성

○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로 미래 부담이 예견

-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까지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많았으나, 2000년 이후부터는 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
- 반면, 통계청(2016)에 의한 2040년의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는 수도권의 0.89배(2000년 1.08배)로 비수도권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
- 따라서, 감소 추세의 생산가능인구의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공급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보다 필요한 시점

○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의 역할 증대

-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유발되는 소득에 대한 효과 및 영향을 간과하여 일자리수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만 운영
- 일자리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 공급을 통해 적정수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단순 일자리수의 확보가 아닌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점을 마련하는데 의의
- 즉, 소득 창출은 지역의 자본 축적으로 순환되며, 일자리의 확보를 통한 노동의 증가는 지역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

○ 반면, 공급되는 일자리 방안과 일자리 수요자간 발생하는 기대심리 및 역량의 괴리로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

-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운영으로 파생된 지역의 일자리 공급 및 수요 패턴에 대한 파악은 여전히 미비
- 더불어, 공동된 사업의 진행으로 지역에 필요한 장기적인 관점의 특화 일자리 조사 부족

○ 따라서, 지역 노동 자원과 지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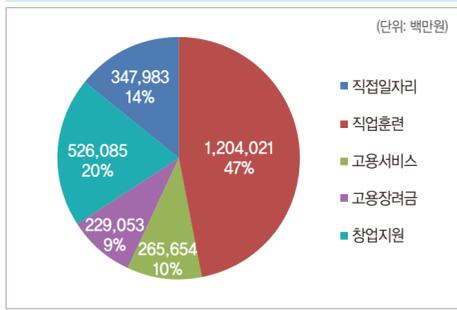
- 기존 지역별 및 산업별 연고산업의 정의를 단순 종사자수를 고려함으로써 지역간 수출입, 노동 인력, 그리고 지역 경제력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보완의 역할 필요
-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과 결합하여 적정한 일자리 제공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시
- 지역 특성과 연관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향후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의 제공 및 빈 일자리의 활용방안 제시의 근거 자료로 활용

일자리 현황 및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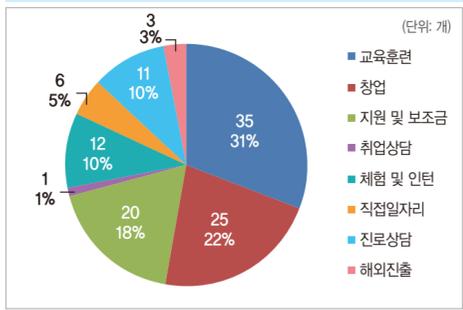
○ 주요 일자리 정책

-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
 -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11만개의 일자리 제공을 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정책 중 최우선시 하여 국정을 운영
 -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, 16년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약 2조3천억원에서 17년 약 2조6천억원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예산이 9.5% 증가
 - 중앙부처의 주요 일자리 공급 유형은 5개로 직접일자리, 직업훈련, 고용서비스, 고용장려금, 창업지원으로 이중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46.8%를 차지
 - 일자리 공급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이며, 직업훈련은 이론적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의 내적역량을 증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관련 업계 및 구직 희망 업종에 적합한 인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
 - 반면,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이 실무와는 관련 없는 직업훈련과 직업훈련 후에도 일자리를 구직하지 못하여 2차 미스매치가 발생

〈중앙부처 일자리 공급 유형〉



〈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공급 유형〉



-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
 - 중앙부처의 일자리 공급 사업 외에 17개 지방자치단체의 113개의 일자리 창출 사업 역시 추진
 -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공급을 위한 대상을 고등학생, 대학생, 석박사, 청년기업, 기업 5개로 구분하여 일자리 공급 정책을 운영
 - 수요자의 구직을 위한 사전 준비로 창업, 교육훈련, 취업상담, 체험인턴, 직접일자리, 보조금지원, 해외진출 등의 형태로 운영
 - 반면, 중앙부처의 사업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일자리 사업 역시 교육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

○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한 사업 운영 미비 : 유사한 일자리 정책의 운영

- 대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, 중소기업 육성, 사회적기업 육성, 직접일자리 제공사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
 -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: 전통시장 활성화,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, 중소기업 육성사업에는 자금지원, 기술개발, 해외진출 지원 등
 - 사회적경제 기업정책 :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과 마을기업,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
 - 직접일자리 제공사업 : 공공근로 사업,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, 희망일자리사업 등
 - 취업지원 프로그램 : 일자리센터 운영 강화, 취업박람회, 구직자 교육훈련 등
-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은 청년, 여성, 노인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,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별 특별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을 추진

○ 지역에 맞는 일자리정책 담당 부서 및 예산 필요

-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일자리정책 담당 부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 부서(과)에서 담당
- 지역별 일자리정책 예산은 20배이상 차이 : A시 67,975백만원, B군 3,030백만원
 - 지역의 구직 규모 및 노동수요에 맞는 사전 조사 필요
-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예산 설정 필요
 - 청년, 장년, 고령층 대상 일자리 공급 계획 및 예산 설정 부족

일자리 공급 고려 요인

○ 연계된 시스템에 의한 일자리 창출로 부가적인 효과 창출

- 일자리 제공의 총량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산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한가?
-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솔루션방식의 정착과 지역의 재발견을 통한 내부적 성찰을 부문별 역할로 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와 잠재력 인식에 대한 관점 정립

○ 실질적인 고용으로의 연계를 위한 양적 외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일자리 공급 정책 운영

- 인력측면에 대한 사전 조사로 비고용자에 대한 일자리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
-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및 기업의 연대 책임 위에 조성된 양호한 환경으로 지역사회내에서 비고용 및 불완전 노동력에 대한 고용 창출

○ 일자리 성과 평가로 연계하여 일자리 공급에 따른 성과를 검토

- 성과달성을 위한 기존의 일자리 공급 정책을 지양하고, 최종 outcome 달성을 위한 일자리 공급을 지향
- 이를 위한 일자리 성과 평가를 통해 질적인 측면으로의 일자리 정책 평가가 필요

○ 일자리 통계 자료축적을 활용한 지역 차원의 지역경제 통계 및 동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종합적인 일자리 관리 추진

- 지역통계 대부분이 보고통계인 상황에서 통계의 종합적 관리는 단순한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통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, 정보화가 행정업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보화를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
- 일자리 통계정보를 체계화하고 종합 관리하여 공동 활용하는 통계정보망 구축
- 단계적으로 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 등과도 연계하여 현재의 지자체 통계조직의 열악한 수준을 극복하고, 통계청, 고용부, 행안부 등의 통계DB 간 연계를 통한 일원화된 지역통계 시스템 마련 필요

○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외에 민간 및 기업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주요 집단간 역할 제시 필요

① 중앙정부

-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된 재정지원 실시 :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이 견인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보조금형식의 재정지원 운영
-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정비 : 기존 양적 미스매치 해소 Hub기관화, 기간인력 취업알선·훈련에서 질적 중심으로 전환된 고용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일자리 공급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연계하여 취업애로계층 및 공공일자리 중심, 고용·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
- 일자리 정보 통계시스템의 정비 및 확산안 조기 운영 및 실천 :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원화된 방식에 의하여 일자리 정보를 통합 및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며, 관리대상 사업으로 일자리 정보서비스를 강화, 더불어 정책의 성과 및 환류 정보를 통한 향후 정책방향 제고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기관 간, 정책관계자 간 갈등 완화와 대국민 소통 강화
- 지역별 일자리 세부 실적 공시·평가의 정례화 :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에서의 공시 내용인 일자리 조성목표 및 실적의 공시를 보완하고 일자리 조성목표의 세분화된 설정에 따른 실적의 공시를 단계별로 추진

② 지방자치단체

-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의 구축 :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지역의 독자적인 일자리 창출 기구의 설치, 민관 협력망 구축, 일자리창출 관련 DB 구축 등 정보망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구축
- 실질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교육·훈련으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자리 경쟁력 확보 :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확보 지식을 구축 및 경쟁을 통한 지식의 축적 도모, 더불어 재교육 수준의 취업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
-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: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패시브한 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 현황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설정
- 일자리 수급자와의 피드백 강화 : 일자리 공급의 향상, 보안을 위한 의견수렴, 보다 합리적 대안에 대한 검토 추진

③ 민간 및 기업

- 고용친화환경 구축 :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용친화적 환경 구축 및 지원
- 맞춤형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: 경제활동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
- 고용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: 시간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, 최저임금상향 및 근로시간단축을 통하여 고용·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 추구

▶ 내용문의 : 박승규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, skpark@krlia.re.kr, 033-769-9891)

지난호 보기 :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고를 위한 제안(김성주 수석연구원) [원문보기](#)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lia.re.kr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